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외 1인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민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민성·정지원 의원(2인)

찬 성 자: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태
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
박교상·박세채·신용하·안주찬
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
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20인)

1.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조 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54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나. 부서검토: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구미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5.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6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동연구가 필요하여 타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7조(예산 편성 전 심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정

우에는 미리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심의 의뢰) ① 주관부서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뢰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계약 방식
4. 정책연구용역 비용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6.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첨단산업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전문가

2. 대학 교수

3.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성·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 및 재정사항을 고려

하여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국장,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연구자 선정) 주관부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진행 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매우 불량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

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연구활용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성과점검)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

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정책기획과

조 례 명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5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에 사전 심의와 결과의 평가·활용 부분을 강화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용역 수행의 타당성이 강화되고 용역 결과의 평가를 통해 결과 활용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정책연구용역 추진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후 관리 강화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 증대가 기대됨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제점 : 용역과제 사전심의 기능이 중복되어 부서에서 용역수행 시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본 개정 조례의 적용에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예산재정과

조 례 명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54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 편성 전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안 제3조)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학술용역과 중복 ▪ (안 제3조제2항)의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은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 조항과 배치 	
<p>□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해당없음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시 기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중복 시행의 문제. - 유사조례 존재 시 조례 간 우선순위 분별이 어렵고, 동일한 내용과 차이는 내용에 대한 개별적 해석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p>(결론) 본 개정조례안 발의 시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 소요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 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

-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위촉위원 10명 × 150천원/명 × 연2회 = 3,000천원
 - 심의의뢰서 유인 : 10,000원 × 100부 × 연2회 = 2,000천원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유장길(☎480-6513)